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불법의료기관 예방교육

*h·well*  
국민건강보험



##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개

- 1-1 연혁
- 1-3 조직도

- 1-2 설립목적 및 업무
- 1-4 요양기관지원실 소개

## 2. 불법개설 의료기관이란?

- 2-1 정의
- 2-3 형사 판결 및 처벌
- 2-5 대표 사례

- 2-2 유형
- 2-4 문제점
- 2-6 적발 사례(4개)

## 3. 신고 및 포상금

- 3-1 불법개설운영 의심기관 신고
- 3-2 포상금 제도

★ 설문조사

# 1.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개

1-1 연혁

1-2 설립목적 및 업무

1-3 조직도

1-4 요양기관지원실 소개



# 1 - 1. 연혁

과거에서 현재, 미래까지 사회보장 중추기관으로서  
국민의 평생건강을 위해 힘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 1st GENERATION 국민 건강의 초석

1963.12.6.  
의료보험법 제정

1977.7.1.  
5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최초 의료보험 실시

1979.1.1.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1981.1.1.  
1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의료보험 적용 확대

## 2nd GENERATION 전 국민 의료보험 실현

1988.1.1.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실시

1988.7.1.  
5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적용 확대

1989.7.1.  
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

## 3rd GENERATION 평생건강을 위한 통합의 바람

1997.12.31.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1998.10.1.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 통합

1999.2.8.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2000.7.1.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 4th GENERATION 세계 1등을 향한 도약

2008.7.1.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2011.1.1.  
4대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실시

2017.8.9.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 발표

2018.7.1.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2022.9.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 1 - 2. 설립목적 및 업무

##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립목적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관리·운영하는 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는 일

### 주요업무

#### 건강보험

- 가입자(외국인 포함) 자격관리
- 지역 및 직장 보험료 부과
- 수가 및 약가 계약
- 급여비용의 지급 및 **사후관리**

#### 건강보험 가입자현황

총 가입자  
**5,135.8 만 명**

외국인(재외국민) 130만 명  
포함, '23.2월 말 기준

####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  
고지 및 징수

#### 노인장기 요양보험

- 장기요양 인정조사, 등급판정
- 급여비용 심사·지급, 기관 평가

#### 기관 운영사업

- 재정 관리, 의료(요양)시설 운영
- 조사연구, 국제협력, 교육훈련, 홍보

#### 건강검진 및 증진·예방

- 건강검진
-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현황

65세 이상 노인  
**116.5 만 명**

전체인구의 10.8%  
'23.2월 말 기준

#### 정부 수탁사업

-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등 22개 수탁사업 수행

# 1 - 3. 조직도

공단은 **본부 조직과 6개 지역본부** 및 **178개 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속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및 서울요양원을 운영 중



# 1 - 4.      요양기관지원실 소개

불법의료기관·약국 관리 강화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 ✓ 불법개설기관 진입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예방활동
- ✓ 사회적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업 강화

정부합동조사(단속) 등 지속적 적발 강화

불법개설 이상탐지 시스템(BMS) 고도화

- ✓ 불법기관 부당이득금 징수
  - ✓ 제도개선 등 효율적 징수 추진
- \* 불법기관 체납자 현장징수 등

# 2.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불법개설 의료기관이란?

2-1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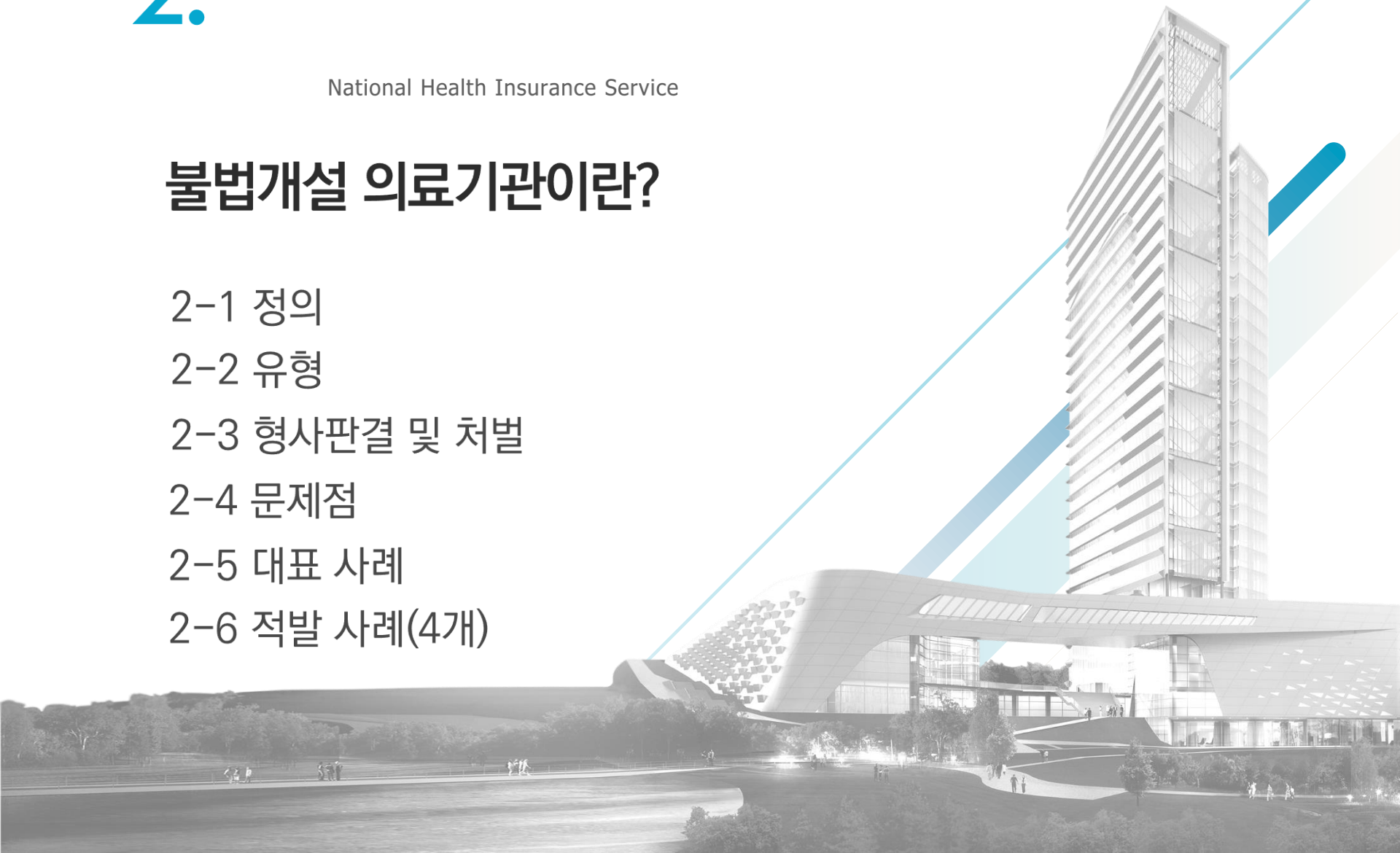
2-2 유형

2-3 형사판결 및 처벌

2-4 문제점

2-5 대표 사례

2-6 적발 사례(4개)



### 불법개설기관 개념

## 불법개설기관이란 ?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된 기관

통상 영리창출을 목적으로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요인

- ▶ 비의료인(비약사)이 의료인(약사)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  
→ 의료법 제33조제2항, 제33조제10항 /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6조제4항 위반
- ▶ 의료인(약사)이 다수의 의료기관 운영 또는 타 의료인(약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 · 운영  
→ 의료법 제33조제8항, 제4조제2항 / 약사법 제21조제1항, 제6조제3항 위반

## 2 - 1. 정의

### “의료행위와 의료기관 개설의 주체에 대한 제한”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 받아 의학적 전문성을 인정받은 의료인에 의해  
의료 행위가 시행되도록 주체 제한  
의료기관 경영에 의료인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도록 개설 주체 제한



의료 행위  
제한



의료기관 개설  
제한

## 2 - 1. 정의

### 의료기관 개설 관련 의료법

#### 의료기관 개설 주체

##### 제33조제2항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법인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의료기관 개설 관련 명의대여 제한

##### 제33조제10항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 제4조제2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 처벌조항 없음

####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제한

##### 제33조제8항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 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 2 - 1. 정의

### 의료기관 개설 주체

의료기관을 개설 할수 있는 자  
(의료법 제33조 제2항)

1.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의료법인

의료법 제48조에 의거 의료기관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의료 공공성 제고하고 의료기관 지역적 편중 해소하기 위해 도입

####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의거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사도지사 또는 주무관청으로  
부터 의료기관 개설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

##### -사단법인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합체

#####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이 인정된 단체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그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비영리법인

※ 2000.6.8. 복지부 문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관련,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은 불가

## 2 - 2. 유형

### 불법개설의료기관 유형

#### 비의료인 위반 유형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



비의료인이 의료(비영리)법인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



#### 의료인 위반 유형

의료인이 타 의료인 명의로 다수의 본인명의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이 타 의료인 명의로 개설



## 2 - 3. 형사 판결 및 처벌

### 불법개설의료기관 처벌

|                                                                                                    | 행정처분<br>(의료법)                                                                | 부당이득 환수<br>(건강보험법)                                                                                                      | 형사처벌<br>(의료법)                                                              | 민사상 효과<br>(민법)                                                         |
|----------------------------------------------------------------------------------------------------|------------------------------------------------------------------------------|-------------------------------------------------------------------------------------------------------------------------|----------------------------------------------------------------------------|------------------------------------------------------------------------|
| <br>의료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허취소</li> <li>· 자격정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li> <li>· 사무장과 연대책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인과 사무장간 모든 계약 무효</li> </ul> |
| <br>사무장<br>(비의료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인과 부당이득금 연대책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li> </ul> |                                                                        |
| <br>사무장병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설허가취소</li> <li>· 직권폐쇄명령</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결과 통보 시 지급보류</li> <li>* 2024.12.31.까지 유효<br/>(헌법재판소 2023.3.3. 결정)</li> </ul> |                                                                            |                                                                        |

## 2 - 4. 문제점

### 불법개설기관 운영 동기 및 행태(사무장 인터뷰)



- 본 슬라이드 영상 포함 파일은 요양기관지원실 조사지원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KBS 시사기획 창] "건강보험 재정 갉아먹는 사무장병원의 민낯, Mr. 병원왕을 찾아라(2021.10.03.) "

## 2 - 4.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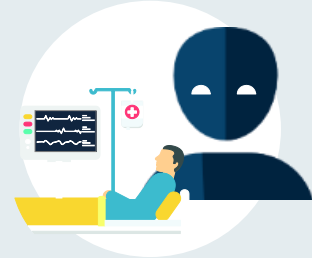
### 불법개설기관 폐해



환자를 돈벌이로 생각  
낮은 의료서비스 질



불법증축  
소방시설 등 미비



불법적인 환자유치  
과잉진료

### 그 결과



국민 안전과 생명 위협



건강보험 재정누수  
국민부담 가중

## 2 - 5. 대표 사례

### 불법개설 의료기관 대표 사례(영상)



- 본 슬라이드 영상 포함 파일은 요양기관지원실 조사지원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불법개설 의료기관 사례] "경남 밀양 세종병원 참사(2018.1.26.) "

## 2 - 5. 대표 사례

### 언론보도

#### 〈 세종병원 화재 참사... 47명 목숨 앓아가〉

2018년 1월 26일 \*\*병원 화재로  
환자와 의료진 47명이 사망하는 등  
15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환자 대부분 나이가 많고  
거동이 불편해 희생자가 더욱 많았다.

조사 결과 \*\*병원은 환자 유치 등 수익증대를 추구하는

‘사무장병원’으로, 불법 증·개축을 강행하고

내화·방화 설비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일보

#### 밀양 세종병원, 생명 ‘뒷전’ 돈벌이 ‘혈안’

2018년 04월 05일 목요일 015면 전국

##### 경찰 ‘155명 화재참사 사건’ 최종 수사결과 발표

‘비의료인’ 이사장이 불법인수  
부식비 등 부풀려 11억 횡령  
이사회 안결고 회의록도 조작  
장례식장 운영하는 행정이사  
“호흡기 산소량 줄여라” 지시도

■ 지난 1월 26일 화재로 155명의 사상자  
가 난 경남 밀양 세종병원이 환자의 생명  
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  
났다.

경찰은 5일 세종병원 우모(여·59·구  
속) 행정 이사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장례  
식장으로 시신을 유치하기 위해 간호사에  
게 환자의 인공호흡기 산소 투입량을 줄  
이도록 지시한 혐의(살인교사 미수)를 잡

고, 추가 입건했다. 세종병원을 운영한 의  
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손모(55·구속) 이  
사장도 부식비 등을 부풀려 10억 원이 넘  
는 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세  
종병원 화재사건 최종수사 발표를 통해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면  
서 과밀병상 등 수익창출에 골몰한 반면  
건축, 소방, 의료 등 환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부실하게 관리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사장 손 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병원 관계자 13명을 불구속 입  
건했다. 밀양시 관련 공무원 16명은 해당  
기관에 징계 등을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2008년 효성의  
료재단을 인수하면서 전임 이사장에게 사  
42억 원을 주고 법인과 병원 운영권을 사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영리 의료법인  
은 ‘매매’ 할 수 없기 때문에 손 씨의 의  
료재단 인수는 원천 무효다. 경찰은 이사  
장실을 압수수색해 손 씨와 전 이사장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확보했고 이사회  
회의록도 허위로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세종병원이 2008년부  
터 최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  
양급여 408억 원을 환수토록 할 계획이  
다. 손 씨는 식자재 납품단가 부풀리기 등  
허위 직원 등재를 통한 급여 빼돌리기 등  
의 방법으로 총 11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행정 이사인 우 씨는 2015년 5월 중환  
자실에서 치료 중이던 노인 환자가 사망  
하면 자신들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으로 유  
치하기 위해 간호사에게 인공호흡기 산소  
투입량을 줄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간호사가 지시한 대로 지  
시를 거부해 미수

는 관련 내용을 이사장에게 보낸 문자 메  
시지가 발견돼 드러났다.

42억 원에 의료법인을 인수한 손 씨는  
세종병원을 운영하면서 불·탈법의 경계  
를 넘나들며 수익창출에 집중했다.

세종병원은 2008년 손 씨가 병원을 인  
수할 당시 7실 40병상이었지만, 31차례  
결전 인허가를 통해 38실 113병상으로  
늘었다. 병원의 적정 의료인은 의사 6명,  
간호사 35명이었지만 의사 2명, 간호사  
4명에 불과했다. 최대한 많은 환자를 받  
기 위해 환자 1인당 면적도 적용받는 법  
적 기준(4.3㎡)을 겨우 넘는 4.6㎡로 병  
상을 배치해 ‘짙나물 병실’을 운영했다.  
한편 세종병원 화재로 환자, 간호사, 의  
사 47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중경상



## 2 - 5. 대표 사례

### 불법개설 의료기관 문제점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참사”

건축 · 소방 · 의료 등 환자 안전과 관련된 부분 부실 관리 및 지출 최소화,  
수익창출을 위한 위법 행위



## 2 - 6. 적발 사례(4개)

###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권 침해 사례 1

東亞日報

2019년 03월 27일 수요일 A14면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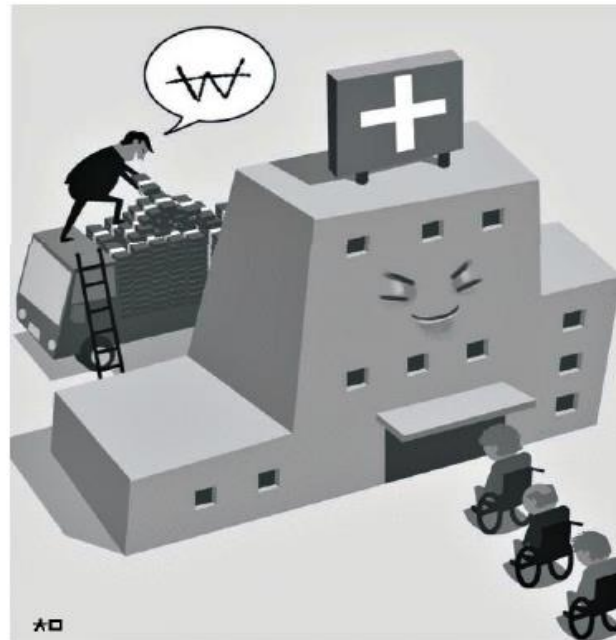
# 사용기한 열달 지난 수액... 1회용 주사제 나눠 써

## 환자 잡는 사무장병원

### <중> 인권 사각 요양병원

병원 1층 주사실 캐비닛 위엔 먼지가 쌓였게 앉았다. 서랍을 여니 주사제 앰퐁에 주삿바늘이 꽂힌 채 나뒹굴었다. 일회용 주사제를 여러 환자에게 나눠 쓴 흔적이다. 수술 도구를 소독할 때 쓰는 고압 증기 멸균기는 녹이 슬어 있었다. 사무장병원을 조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2017년 3월 충남 A요양병원 조사를

‘환자=돈벌이 수단’ 잘못된 인식  
약제비 덜 쓰고 위생상태 엉망  
인공호흡기 산소투입량 줄이기도  
불법 요양병원 10년간 277곳 적발  
건보 재정 1조3000억 빼먹어



## 사무장 요양병원에서 벌어진 일

|                   |                                                                                   |
|-------------------|-----------------------------------------------------------------------------------|
| 경남 밀양시<br>세종요양병원  | 행정여사가 정례식장으로 시신을 유지하기 위해 간호사에게 “환자의 인공호흡기 산소 투입량을 줄이라”고 지시했다가 살인교사 미수 혐의로 입건      |
| 충남<br>A요양병원       | 주사제 앰퐁에 주사기를 꽂아둔 채 보관. 간호사실에 보관해둔 증류수와 영양수액, 카테터(의료용 튜브) 등 의료용품 256개가 전부 사용기한이 지남 |
| 울산<br>B요양병원       |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위장해 고령의 치매, 뇌중풍 환자를 끌어들이며 항생제를 과다 투여하며 8년간 83억 원을 빼먹음               |
| 전남 장성군<br>효사랑요양병원 | 2014년 화재(21명 사망) 당시 환자들이 병상에 끈으로 묶여 있어 구조가 지연됨                                    |

## 사무장 요양병원을 둘러싼 주요 수치

|                                          |                                                             |
|------------------------------------------|-------------------------------------------------------------|
| 돈벌이에 혈안(2009~2018년)<br>1곳당 평균 부당 청구 진료비  | 속출하는 병원 내 사망자(2009~2017년)<br>병상 100개당 연평균 사망 환자 수           |
| 사무장 요양병원 48억2632만 원                      | 사무장 요양병원 165.9명                                             |
| 기타 사무장병원 9억6662만 원                       | 일반 병원 21.9명                                                 |
| ‘콩나물시루’ 병실(2009~2017년)<br>병실 1개당 평균 병상 수 | 부족한 의료 인력(2009~2017년)<br>‘의료인력 1등급’ 비율(의사 1명당 환자 수가 최적인 비율) |
| 사무장 요양병원 6.4개                            | 사무장 요양병원 79.2%                                              |
| 일반 요양병원 6개                               | 일반 요양병원 86.5%                                               |
| 밀양 세종요양병원은 15안실까지 운영                     |                                                             |

## 2 - 6. 적발 사례(4개)

###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권 침해 사례 2

#### 34주 태아도 낙태하는 인면수심의 사무장병원

제왕절개로 분만을 유도해 태어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는데도  
물에 넣어 숨지게 한 사무장병원

A 산부인과 실제개설운영자인 비의료인 C씨

병원 매출을 올리기 위해 ‘낙태, 임신중절수술’이라는 내용으로 병원 홍보

임신 34주째인 산모의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생, 집도의를 시켜 신생아를 물에 담가 질식사하게 하고  
사체를 의료폐기물과 함께 소각

산부인과 외형을 갖췄으나 사실상 낙태 전문으로 운영되었으며  
살아서 태어난 아이에게 의학적인 처치를 할 시설 및 신생아실 없음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비용보다 고액인 2,800만 원을 받고 수술,  
비용은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



## 2 - 6. 적발 사례(4개)

###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권 침해 사례 3

#### 비뇨기과 전문의 행세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무장

12년 간 비뇨기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5,942회에 걸쳐 진찰, 치료, 약처방, 주사, 채혈검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삼은 사무장

B 비뇨기과 실제개설운영자인 비의료인 J씨

인터넷 사이트에 남성의를원을 개설할 원장을 구하는 구인 광고를 올려 의료인 L씨를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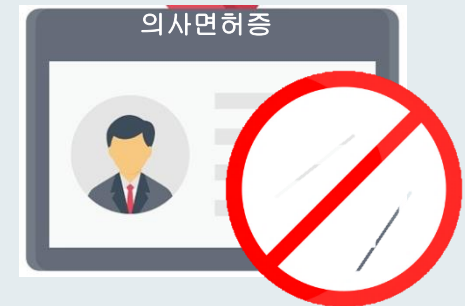
L씨의 명의로 병원 개설 후 L씨와 진료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무장병원 운영

의료 면허 관련 허위 이력을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환자 대기실에 게시하여 ‘부원장’으로 근무

의료인 L씨가 없거나 수술 중에 방문한 L씨의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

적극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삼았음



## 2 - 6. 적발 사례(4개)

### 의료생태계 파괴 사례

#### 배후에서 자금 투자하고 지인 내세워 사무장병원 운영

최근 개설과 운영의 이원화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배후에 숨어 자금을 투자하고, 지인을 전면에 내세워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해 온 사무장에 대해 법원은 징역형 선고

물리치료사 L씨는 사무장병원 개설자금 3억 원을 대고 J씨에게 사무장병원의 운영을 부탁  
J씨는 병원 건물을 임차하고, 의료 설비 및 비품을 갖춘 후 소개업자를 통해 K씨를 대표원장으로 고용  
K씨가 그만두자 친분 있는 의료인 A씨와 월 1,300만 원, 진료 시 500만 원 추가 등의 급여 계약을 체결  
J씨는 주도적으로 병원 운영을 하면서 일일매출과 환자현황 등을 L씨에게 보고  
영업사원 및 병원 직원들이 환자를 소개해 입원할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의 10~3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122명의 환자를 유치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며, 공단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지급받음



# 3.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신고 및 포상금

3-1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

3-2 포상금 제도



# 3 - 1.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

## 신고의 필요성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 바로 의료인과 국민 여러분의 불법개설 의료기관 신고 입니다.  
특히, 내부 사정에 밝은 요양기관 종사자의 신고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신고인 자격

|   |          |  |                                                                                                          |
|---|----------|--|----------------------------------------------------------------------------------------------------------|
| 1 | 요양기관 종사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의사, 약사 등 의료인</li><li>- 의료기사 등 의료관계인</li><li>- 행정 사무원 등</li></ul> |
| 2 | 의약업체 종사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약재 · 치료재료 제조 · 판매업체 종사자(임직원)</li></ul>                           |
| 3 | 일반 신고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반 국민은 누구나</li></ul>                                             |

## 3 - 1.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

### 신고 대상 유형



“예비 의료인은 이런 곳을 조심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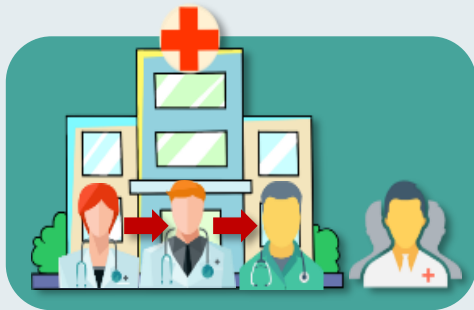
- ❶ 비의료인(사무장) 의료기관 직원의 근로 계약을 주도한다
- ❷ 비의료인이 의사에게 의료기관 공동 투자 · 운영을 제안한다
- ❸ 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실질적 개설 · 운영 주체가 법인이 아닌 제3자 이다



# 3 - 1.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

## 신고 대상 유형

“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병원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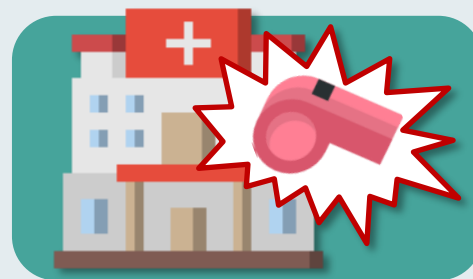
개설자는 자주 바뀌나,  
직원은 그대로 승계하여 개설한 기관



동일 명칭, 동일 장소에서  
개설자만 2년 내에 3회 이상 변경한 기관



고령(70세 이상)인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고 입원실을 운영하는 기관



민원신고,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으로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기관

# 3 - 1.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

## 신고 방법(공단)



### 신고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감사원

시·군·구 보건소

유관협회

### 공익 신고 방법

재정지킴이 제안 · 신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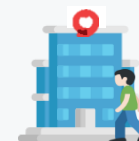
공단 홈페이지  
신고센터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전화 또는 우편



방문접수

\* 홈페이지 : 민원요기요 > 재정지킴이 제안 · 신고센터 > 불법개설기관 신고 > 불법개설기관 신고하기

\* 모바일앱(The 건강보험) : 고객센터 > 재정지킴이 제안 · 신고센터 > 부당청구 요양기관 및 불법개설요양기관 신고



### 공익 신고 유선 접수



공단 본부

033-736-4433

광주전라제주본부

062-250-0360

서울강원본부

02-2126-8970

대전세종충청본부

044-251-7460

부산울산경남본부

051-801-0730

인천경기본부

031-230-7950

대구경북본부

053-650-8530

## 3 - 2. 포상금 제도

### 포상 제도 개요

#### 개요

요양기관종사자,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 종사자 또는  
요양기관 이용자 및 국민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행위나 본인 진료 건을 신고하고  
공단 확인결과 부당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근거

- ▶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포상금의 지급)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 ▶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

## 3 - 2. 포상금 제도

### 신고 포상금

#### 공익신고 포상금은?

요양기관 종사자 신고 시

**최고 20억원**

일반인 신고 시

**최고 50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동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 지급

#### 공익 신고자 신분 보장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분보호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

## 3 - 2. 포상금 제도

### 포상금 지급 사례

#### ▶ 사례 1

비의료인(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한 사실을  
내부종사자가 신고하여 13억 원 환수, 신고자에게 1억 1천 만원 포상금 지급

#### ▶ 사례 2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를 실시한 사실을  
내부종사자가 신고하여 3억 6천 만원 환수, 신고자에게 3천 4백 만원 포상금 지급

강의 만족도 설문조사



# 감사합니다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